

민주진보단일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질의 답변서

I

공무원 노사관계

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노조에 대한 관점과 향후 경북교육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경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관련 모든 노동조합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저는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노동조합이 교육 및 교육행정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감 직속기구로 ‘가칭)경북도민교육회의’를 신설해 교직원, 학부모, 시민사회노동단체, 지역주민이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경북교육노조와 교육감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행정조직 문화개선 사업의 혁신 로드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등 경북교육노조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계획인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경북교육노조를 비롯한 교직원 관련 모든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또는 정책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해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에 공무원노동3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활동보장을 위해 정치권을 통해 민간노조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를 공무원노조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허용과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노동3권이라고 말하는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하나로 묶여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노동기본권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단결권과 교섭권에도 제한이 있으면서 단체행동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기본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법률로 보장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이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II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로조건 개선

1. 경북교육청은 해마다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정부 주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위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일선 교육현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의 평가중심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교육감이 된다면 어떤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싶으십니까?

답변 경북교육청의 교육 및 교육행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북교육청은 우수한 평가 성적을 목표로 주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경북교육의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우수한 평가 성적이 아니라 진정한 경북교육 발전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 경북교육노조는 창립 초기부터 행정실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조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반대로 소관위에 계류 중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원단체가 행정실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

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국교총이 학교에서 교직원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된다고 행정실법제화에 반대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실의 법제화는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이므로 한국교총의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실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행정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구성원인 행정실 직원의 업무에 대한 법적, 합리적 근거를 만들고 행정실 직원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학교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실 직원이 학교자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사회가 고도화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경북교육청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실질적인 증원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공무원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 정책으로 학교 행정실의 단위업무는 늘어났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근거 없는 공무원 정원 5% 삭감 이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근거 없이 삭감된 정원 5%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폐지하고 교직원(공무원, 교육실무직원, 교원)의 정원 운용과 관리가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교육감협의회에 핵심의제로 만들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북은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업무는 갈수록 전문화·복잡화되고 새로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아무리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나홀로 행정실장의 업무과중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북지역 실정으로 인해 나홀로 행정실장의 해소가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병설유치원의 행정직원 별도 정원 확보 등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홀로 행정실장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지원인력을 상시 배치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 과거의 공직사회는 행정직이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직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에는 시설, 공업, 사서, 전산, 보건 등 다양한 기술직 지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직은 대부

분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정원 및 인사 등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공사와 정보화업무 등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직 우대 정책과 소수직렬 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학교 시설공사와 정보화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직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분석을 통해 기술직의 정원을 확보하고 승진 인사 등에서 차별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현재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은 급별 및 규모에 따라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관리, 교육실무직원 노무관리 등 중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행정실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즉, 교장과 교감이 학교 급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행정실장을 6급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 정책으로 학교행정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실장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6급 이상의 직급을 행정실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인력수급 및 정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정실장을 6급 이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분석과 교육감협의회의 협의 등을 통해 각급 학교 행정실장의 직급 상향조정 방안을 찾겠습니다.

7.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은 실제 유치원업무를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수당을 받고 있는 교장 및 교감과 달리 관련 수당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국정감사 시 소관위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공무원이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국가공무원의 보수를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겸임수당의 지급을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로 지급 금액과 범위를 정해 국가공무원인 교장과 교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겸임수당의 지급을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등의 규정이 없더라도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따라 보직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의 유치원 겸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겸임수당)의 규정을 근거로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을 명시한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학교에 시달함으로써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 위 방법으로 유치원에 별도 행정인력이 배치될 때까지 유치원 겸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14년부터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를 500점(50만원 상당) 배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공무원 및 일반지자체 공무원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신규 공무원일 경우 기본항목의 단체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맞춤형복지비를 인상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국가공무원이나 일반지자체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의 맞춤형복지비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10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후생복지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한 5개 이상의 교육청도 후생복지조례가 있습니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해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복지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조례를 통해 교육실무직원, 지방공무원, 교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의 근거를 만들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연과 지연, 정실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능력위주의 인사, 적재적소 인원 배치, 순환보직제 활성화, 능력 있는 인재 발굴 등 혁신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떠한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실 계획입니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인사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해야 공무원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인사 결과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신이 많으며 내부 청렴도평가에서 인사부분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능한 인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원에 준하는 정도로 세밀한 표창, 승진, 전보의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표창, 승진, 전보에서 도교육청 근무자가 우대를 받고 있어 학교근무자는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업무량이 많아 전입하려는 공무원이 없으므로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도교육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을 포함하는 완전한 순환근무제 실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은 행정실의 업무 증대로 귀결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원들의 행정업무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하위 행정기관으로 여기고 불필요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만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의 불필요한 공문시달을 막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없애 교직원 모두의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학교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정상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의 한축인 지방공무원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교원위원을 지방공무원이 포함된 교직원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 진정한 민주주의는 직업, 종교,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 외의 직원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교육감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선정해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018. 5 . 24.

경상북도교육감 후보 이 찬 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